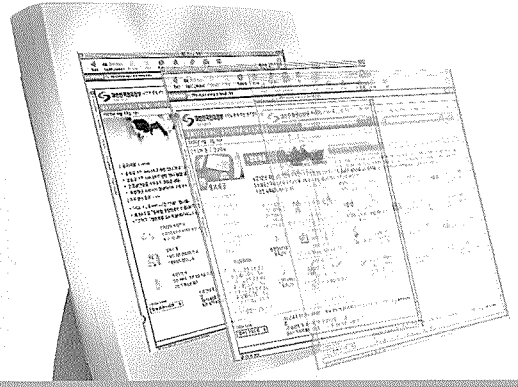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청사진



세계최고의 IT기술과 솔루션, 그리고 들쭉처럼 번지고 있는 정부개혁운동 속에서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비전과 도전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 10대 아젠다와 31개 세부과제

전자정부 로드맵에서는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10대 아젠다와 31개 세부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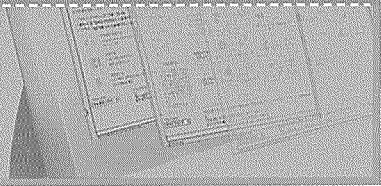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정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통한 지식정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통한 참여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과 함께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를 관청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공유를 통해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우선 2005년까지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국가 주요 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2006년까지는 전자문서대장으로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며, 2005년까지는 인사·감사·예산 등 정부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도 상호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보화가 미흡하였던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정보화를 2006년까지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도종합정보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One-Stop으로 연계된 지방분권시대의 전자지방정부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2006년까지 행정기관의 민원첨부서류 제출요구는 폐지되고, 2005년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부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책정보의 상호 공유가 의무화된다. 그리고, 행

정개혁과 연계하여 2005년부터 정부부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연관성 있는 정부기능은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정부내 중복된 기능은 폐지되고, 국민들은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는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도 한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 로드맵 : 10대 아젠다 31개 과제

추진분야	아젠다	우선 추진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1)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 혁신	2.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3.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4.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 실시간관리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정보자원 관리 혁신	5.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6.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7.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8.정보보호체계의 강화 9.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 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9)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1)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법·제도 정비	10.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31)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도 정비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15%에 머무르고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을 85%까지 향상시켜 모든 민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신고·처리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005년까지는 부처별·업무종류별로 분산된 각종 복지관련 서비스도 복지포털서비스망으로 통합되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2006년까지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취업 종합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전국의 모든 고용관련 정보와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의 정보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된다. 그리고, 2006년까지 식품·의약품에 대한 종합포털서비스망과 국가안전관리정보망이 구축되어 국민들의 식생활·건강·안전에 관한 종합정보서비스도 제공되며, 2004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전자적 신고 및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관련 One-Stop서비스가 제공되며, 2007년까지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한 수출입기

반의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이 구축되고, 2005년까지 시장조사·계약·운송·통관·결제 등 무역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전자무역서비스망이 구축되어 물류와 무역에 관한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적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사이버정부정보공개센터를 구축하여 정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의 목록 열람과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2005년에 전자선거제의 시범도입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생산적이면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5년까지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고, 정보기술기반의 표준화 및 연계도 확대하여 정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게 되며, 전자정부 통신망의 통합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행정내부의 생산성과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자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해커 등 불법 침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축·고도화함과 아울러 정보화 조직 및 인력도 전문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위주의 각종 민원 및 업무관련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일괄정비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행정개혁과 지방분권도 촉진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참여와 관심이 긴요하므로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학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단계별 기대성과

2005년 말까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 감사, 재정, 인사, 결제, 조달 등은 전부처가 전자적으로 처리
- 서비스 중심의 상시적 프로세스 개혁과 체계적인 정보화 가능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민원구비서류와 관청방문회수 대폭 감축
- 무역, 물류, 기업설립·운영의 전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가능

정보관리와 법제정비에 있어서는

-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통신망 통합관리로 정보자원 효율적 활용
- 주민등록법 등 오프라인 위주의 개별법령을 일괄 정비

2007년 말까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 부처별 업무단일창구를 통해 제반 행정업무의 온라인 수행
- 범정부 KMS 구축으로 행정업무처리에 있어 지식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 투자, 금융, 무역, 물류, 세금 등의 상호연계에 의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와 전자토론·투표 등의 확대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미래 정부의 달라진 모습

전자정부 수준

	<현 재>	<5년 후>
전자정부 완성도	정보제공~전자거래	통합처리
전자정부지수(UN)	15위	5위 이내
정보화지수(IDC)	16위	5위 이내
정부투명성(TI)	40위	20위권

2. 유엔 전자입찰 표준안에 조달청안 채택의 의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는 세계 모든 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설공사 전자조달 절차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지난 3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무역 및 전자거래 분야의 국제표준화 회의인 유엔세팩트(UN/CEFACT) 제6차 포럼에서 조달청(청장 최경수) 전자입찰 절차가 반영된 표준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은 담당 워킹그룹(TBG6)이 발의했으며, 새로운 기술표준인 XML 기반으로 최초의 유엔 비즈니스 표준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입찰 업무처리 표준절차는 업체등록에서 입찰결과 공고까지 전자입찰의 핵심절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건별 자격심사와 구분되는 업체등록, 입찰결과와 개별통보가 아닌 공고 등 한국의 절차를 관철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입찰보증,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등록, 입찰공고에 예산항목 포함 등 나라장터에 고유한 업무처리 절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엔의 시설공사 전자입찰 업무처리 표준절차에 한국의 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성과는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국제표준 제정 활동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번 표준절차 제정에 따라 앞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나라는 이 절차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므로 전자입찰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며, 전자조달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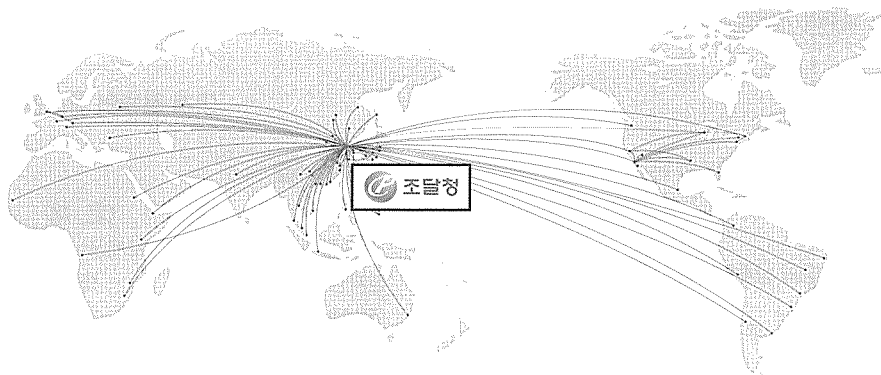
조달청은 2003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전자입찰 표준화를 추진 중인 TBG6뿐 아니라 총괄조정그룹(TBG17)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자입찰 표준화는 일본의 발의로 2002년에 착수되었으며, TBG6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체코 등 7개국이 참가 중이다.

※ 프랑스가 의장, 최초 발의자인 일본이 프로젝트 대표, 한국은 총괄조정그룹에 함께 참가하며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등 핵심 역할 분담

유엔세팩트 총괄조정그룹 위원인 이재용 정보관리과장 등 2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조달청은 표준화활동과 모바일 전자입찰 등 한국의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모든 분야 및 절차에 이미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어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문서 표준화와 물품 및 용역 전자입찰은 물론, 전자계약, 전자지급 등 전자조달 전 분야로 국제표준화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형중 물자정보국장은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표준 제정의 의미는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교분을 쌓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홍보해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는 2004년에 43조원이 거래되고 전자입찰만 12만건에 1,800만명이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작년 유엔의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조달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세계제일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행정서비스 "이젠 수출시대"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해 만든 각종 행정시스템이 해외 지자체로부터 "리브콜"을 받으면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3월 23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중국 베이징시와 대중교통 체계 개편사업을 위해 양 도시가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베이징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서울시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이 협약의 주 내용이다. 시는 현재 베이징시의 교통체계개편 사업 규모는 최소 1천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LG CNS 등 국내 IT(정보통신)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수출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모스크바시에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모스크바시가 2007년까지 6백 28억루블(2조 3천 4백 30억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e-모스크바 프로젝트"에 서울시와 삼성SDS, LG CNS 등 국내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모스크바시 외에 카자흐스탄, 하노이(베트남), 베이징(중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등과도 전자정부 수출을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도 지난해 4월 일본 사가시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했다. 이 사업은 전자결재, 인터넷민원서류발급 등의 e-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강남구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는 1백 3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행정시스템 수출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한해동안 인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각국 정부가 지난해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견학했으며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 22개 국 2백18명이 서울시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돌아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행정서비스가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행정서비스 수출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인 삼성SDS가 일본 현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국내 전자정



▲ LG CNS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전자정부 구현사례 및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부시스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1차 행정 정보화 프로젝트에 이어 사가시 주변 3개 지자체의 행정전산망을 통합하는 내용의 2차 사업도 수주해 오는 9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일본 최초의 '전자정부' 사업일 뿐 아니라 외국 IT 서비스 업체가 일본의 공공기관 시스템을 구축한 첫 번째 사례다. 삼성SDS는 일본시장에서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선진국 전자정부 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S는 현재 일본에서 추가적인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3~4개 지자체들과 접촉 중이다.

LG CNS (대표 정병철 www.lgcns.com)가 지난 17일 세계 12개국의 정보화담당관들을 대상으로 'Exploring the way to e-Society'라는 주제로 전자정부 구현사례 및 방안을 전달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박명재 www.coti.go.kr)과 한국국제협력단(총재 김석현 www.koica.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행정정보관리과정으로, 전자정부 구현의 모범사례인 우리나라의 사업현황 및 추진 방법론을 보급,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과정에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에서 초청된 16명의 정보화담당관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